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

차 례

2021. 4. 29. (목) 14:30-17:00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사 회** 나혜정 -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표
 국민의례

| **인사말** 길원평 교수 - 진평연 집행위원장

| **축 사** 법 일 스님
 원성웅 목사 - 진평연 상임대표

| **사진촬영**

| **발 제**

- | | |
|----------------------------|----|
| 1. 정천구 - 전 영산대 총장(불교) | 05 |
| 2. 오명식 - 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 | 21 |
| 3. 음선필 - 홍익대 교수 | 29 |

| **토 론**

- | | |
|-----------------------------|----|
| 1. 김지연 -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 51 |
| 2. 연취현 -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변호사 | 65 |
| 3. 이진수 - 더위드뉴스 대표 | 71 |

| **주 최**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748개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발 제

발제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세 가지 관점

-종교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정 천 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고문)

영산대 前총장)

I. 머리말

“악마는 세부사항 속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이 있다. 원래는“신은 세부사항 속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는 말이었다고 한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의 속담”¹⁾ 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구체적인 사항에서 악마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져 그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제 선한 사람들도 세밀한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처님의 선한 의지가 세부적인 사항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연계되었다고 보는 건강 가족법 개정안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서 국민이 많이 깨어난 거 같다. 이번 개정안 반대에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애국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든든하다. 발표자는 불교 신도단체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의 일원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6년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7번이나 폐기 또는 철회된 바 있다. 그러자 같은 계통의 발의자들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과 정춘숙 의원 등이 추진하는 별도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세밀히 살펴보면 둘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구했던 같은 목적을 다른 법안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 같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일 것이다.

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5%EB%A7%88%EB%8A%94_%EB%94%94%ED%85%8C%EC%9D%BC%EC%97%90_%EC%9E%88%EB%8B%A4 (검색일: 2021년 4월 23일).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발표된 진평연의 성명²⁾과 전용태 변호사의 글³⁾ 등에 잘 나와 있다. 성명에서는 문제의 법안이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개정안은 가족 형태를 차별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고 동성 커플 결합을 사실혼 유형으로 내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 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별금지법안이나 건강가정법을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학생 인권종합계획안이 통해,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러 종교의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⁴⁾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논의는 인용한 글들에서 소상히 언급 되었으므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도록 할 것이다. 필자는 종교적 관점과 자유민주주의의 관점,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법안에 대한 반대 논지를 펴고자 한다.

II. 종교적 관점

이 개정 법안에 반대하는 여러 종교단체가 있다. 물론 종교단체들의 입장도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에 참여한 종교단체들은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관점에 이견(異見)이 없다고 본다.

그중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들의 공통 가르침으로 알려진 칠불통계(七佛通戒)에 잘 나와 있다. 그것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는 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로 되어 있다.⁵⁾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권선징악과는 다르다. 부처님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시는 자비를 행하나 징벌을 내리는 분은 아니시다. 죄와 벌은 자기 스스로가 지어서 받는 자기 책임 사항이다. 악의 책임이 선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2) 진평연 성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문 열 것,” 『기독일보』, 2021.2.4.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175#share>

3) 전용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법안과 문제점,” 《월드뷰》 2020. 9.28.

4)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1359#share> (검색: 2021년 4월 20일).

5) 한문 원문은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이다. 출처: 《출요경》《법화경》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자기 책임이라는 기독교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법안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인간의 성(性)에 관한 불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불교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성적 청정성을 수행 생활의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⁶⁾

2. 성욕은 식욕, 수욕, 성욕 등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욕망으로 이를 잘못 다루면 자기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불교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불교의 계율에서 재가 신도에게는“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불사음)는 계율이 적용된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부간에도 지나친 욕망과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성관계는 금하고 있으며, 더구나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⁷⁾

그러나 승려에게는 훨씬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승려에게 “음계를 범하지 말라”는 계율(不淫戒)은 제일 계율로 이를 범하면 승단에 함께 살 수 없어 승적을 박탈하는 바라이 죄에 해당한다. 승려의 성행위 금지대상에는 축생만이 아닌 비인녀, 3종의 황문(黃門), 3종의 이근자(二根者), 3종의 남자 등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된다. 황문과 이근자는 각각 성적으로 특이한 취향을 가지거나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갖춘 자를 가리킨다. 남자란 비구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 즉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⁸⁾

불교의 율장이 승단에서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는 성욕과 같은 감각적 욕망의 배후에는 탐욕과 속박, 집착 등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선하지 못한 요소가 있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는 수행을 지속하는 데에 큰 방해 요소이기 때문이다.”⁹⁾

6) 하남걸, “동성애에 대한 불교적 관점,” 《불교평론》 34호, 2006.3.

7) “불사음계”, 《불교신문》, 2007.03.3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78> (검색일: 2021년 4월 23일).

8) 이자랑, “율장을 통해본 성 윤리”, 《불교평론》, 2018년 8월 1일.

9) 이자랑, 같은 글.

이상으로 보면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성전환자)로 요약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불교의 규범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승단의 규율로 성 소수자의 입단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승단의 목적을 위한 규칙임으로 이의 위반을 제지하고 이런 계율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교 가정에서 불교 신도가 지켜야 할 5계의 하나인 “샷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계를 자녀와 가족 그리고 포교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권장하는 것은 차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 불교는 지옥 중생도 자비로 이끈다는 큰 원력(願力)을 가지고 있다.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어주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할 뿐이다.

다음 문화적 관점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소수자 문제를 전면으로 끌어내어 문화해체 운동을 벌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시즘의 문화적 변용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아 공격했고 이를 문화적으로 변용시킨 그람시와 루카치는 자본주의가 견고한 것은 전통문화와 특히 기독교와 교회, 전통 윤리 등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길이라 보았다. 기독교와 기성종교 그리고 전통문화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행동을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마침내 그들이 종교와 전통문화를 끝낼 것으로 우려된다.

당면한 문제는 국가가 성 소수자 차별금지를 넘어 이들을 과도하게 우대하여 국가가 성 소수자의 행태를 조장하고 사회를 소수자와 다수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며 특히 국가가 사적 문제에 개입하여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상이 종교적 관점에서 문제의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Ⅲ. 자유민주주의의 관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훼손하고 인간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관점과 배치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이념적 목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내 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다. 이를 가장 잘 구현해 나가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 우애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지 않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 마르크시즘은 평등을 내세워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전체주의 독재로 귀결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은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다르다.

평등은 상대적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은 산술적 평등이 아니며 정의의 원칙을 고려하고 인류사회의 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평등이다. 산술적 평등은 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평등을 내세워 모든 학급 구성원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 많이 한 것만으로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힘이 없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외면한다면 우애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복지정책 등으로 경쟁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는다.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사회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 중요하다. 이 모든 걸 고려한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다.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명작을 쓴 후쿠야마는 역사의 진보를 추동하는 두 세력을 하나는 경제요 다른 하나는 헤겔이 언급한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라고 보았다.¹⁰⁾ 경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시장(市場)의 힘에 따라 발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정을 위한 투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엄과 지위를 인정을 받기 위한 인간 존재의 욕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 두 가지 투쟁에서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¹¹⁾ 경제발전 분야에서 공산주의의 중앙통제 지시 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었다. 인정을 위한 투쟁에서도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 인권의 존중을 통해 발전시킨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정을 이길 수 없었다. 경제도 파탄에 이르고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는 공산주의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권력 제한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법안과 건강가정법 개정안은 한국의 헌법을 넘어서려 하고 있으며 하위법인 정부령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언론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

1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pp.3-4.

11) 정천구, 『금강신문』, 2015년 3월 10일, p. 15.

고 있다.

의회에서 적법절차를 통해서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최고의 자유주의 사상가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는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정의의 법이 갖추어야 할 보편성, 확실성 그리고 평등성을 갖추지 못한 법은 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¹²⁾

첫째, 보편성이다.¹³⁾ 법 규칙은 개인과 사적 조직은 물론 정부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혜나 특권의 허용, 인허가, 이것은 결코 법의 지배원칙에 해당하는 법이 될 수 없다.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를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자유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 짓는 것은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며 공적 영역과 구분된 사생활이 있느냐 없느냐다. 사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만 복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⁴⁾

둘째, 확실성이다. 법은 알려져야 하고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 사회에서 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확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¹⁵⁾ 서구 사회를 번영으로 이끈 무엇보다 중요한 단일 요소는 서구에서는 법의 확실성이 널리 행해져 왔다는 점이다.

셋째, 진정한 법의 세 번째 조건은 평등성이다. 모든 법은 모든 수단에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법의 지배의 이상은 법의 강제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법 개정안이 위의 열거한 정의의 법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에 맞지 않다고 본다. 급진적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양성평등의 원칙을 어기고 생물학적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안들

12) Fredrich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na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Chengcheng Books Ltd, University of Chicago, 1960, reprinted by the English Edition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205-212.

13) 위의 책, pp.205-207.

14) 위의 책, pp.207-208.

15) 위의 책, pp.209-210. 및 민경국,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질서의 상호관계성 고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27('87.9), pp.15-30.

16) Hayek, 앞의 책, pp.209-210.

은 법의 보편성, 확실성 그리고 평등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개정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다.

IV. 문화적 관점

1. PC(정치적 올바름) 문화운동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달구어 온 미투사건, 섹스 스캔들, 동성애 문제, 성 소수자 문제 등은 PC 운동(PC: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로 약칭)에서 다루어 온 문제들이며 그것이 차별금지법으로 발전해 왔다고 본다.

21세기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 인종, 소수 종교 등 피압박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운동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약한 쪽과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논리이며 이러한 운동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세를 이끌어 갔다. 누구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웠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PC 운동은 극성을 부렸으며, 누구라도 여성, 인종, 종교, 성 소수자(LGBT)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PC 지배 사회를 만들었다. 여성이나 성 소수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흑인을 흑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이라 말해야 했다. 종교적 차별을 피한다고 크리스마스 날 공공장소에서 축하 행사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도 종교 편향, 인종편향이라고 이슬람 테러집단이란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사회가 된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이런 금기를 공개적으로 깼다. 이슬람 테러를 이슬람 과격주의 단체 들의 테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미국을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여성 대통령 후보 힐러리 후보에게도 여성이라고 봐주지 않고 문제가 되는 점은 과감하게 공격했다. 물론 PC 운동과 한편이 된 주류 언론은 집요하게 PC

로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다.

PC와 한편이 된 주류 언론은 개표 시점까지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기사를 냈으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PC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¹⁷⁾

2. PC 운동의 기원

일반적으로 PC의 근원을 죄르지 루카치(헝가리인 Lukács György, 1885~1971)와 안토니오 그람시(이탈리아인 Antonio Gramsci, 1891~ 1937)에서 찾지만 그 원조는 레닌과 마오쩌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¹⁸⁾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생각과 행동을 올바른 정치적 견해라 보고 그와 다르면 숙청을 서슴치 않았다. 마오쩌둥은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것은 영혼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¹⁹⁾ 자기와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미물이 되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루카치와 그람시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에 주목하였다. 1차 대전 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의 조국인 소련의 노동자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은 계급보다는 자기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강점은 기독교와 교회, 전통 윤리 등에 있다는 자각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 의식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이라는 저서로 마르크스 이래 지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인정을 받았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그의 근본적 정서는 증오(hatred)였다. 그는“사회적 혁명적 파괴가 시대의 문화적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본다,”고 했으며 불세비즘을 옹호하면서 혁명으로 이런 낡은 가치들을 절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는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²⁰⁾

17) 정천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외정책,” 대불총 연수(2018. 9.1~2) 특강 원고, p.3.

18) Cinthia Ruper, “Polittical Correctness,”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political-correctness> (검색: 2021년 4월 23일).

19) 마오쩌둥 어록, “没有正确的政治观点,就等于没有灵魂 Not to have a correct political point of view is like having no soul. 1957.

20) Raymond V. Raehn, “The Historical Roots of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루카치가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교육부 부장관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은 학교에 성교육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성도덕의 파괴가 자본주의 문화를 파괴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보았던 거다.

루카치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를 성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연구소에서 그 후 아도르노, 에리히 프롬, 마르쿠제 등이 마르크시즘의 경제적 이론을 문화적 이론으로 변환하는 일을 해냈다. 이들은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도르노의 《권위주의적 성격》, 마르쿠제의 《일차적 인간》, 《에로스와 문명》 등의 저서는 세계의 지성계를 강타했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전통적 문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로스와의 문명은 성의 개방으로 1970년대 베이비붐을 이끌었으며 1960년대 신좌익의 바이블이 되었다.

문제는 이 운동이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보수주의자까지 합세하여 확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 운동은 앞에서 말한 대로 소련 공산당의 정책과 원칙 즉 공산당의 노선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기와 1980년대 초기까지 자유주의 정치인들도 좌익 쟁점의 극단주의를 언급하면서 특히 그 내용보다는 언어표현과 대학에서의 진보적 좌익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용어는 줄어들고 코미디에서 자주 거론되며 풍자적인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21기에 들어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치적 올바름(PC)으로 전환했다. 마르크스의 주장을 원래대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강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약한 쪽과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논리이며 문화적 마르크시즘이다. <문화적 마르크시즘과 정치적 올바름의 기원(The Origins of Cultural Marxism and 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글을 쓴 William Lind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들은 말하고 쓰고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쁜 단어, 공격적이거나 무감각하거나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주의

<http://arcofcc.freesevers.com/Documents/pc.html#TOP>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자이거나 동성애 혐오자(라고 간주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PC 운동)이 파괴되지 않는 한 PC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문화라고 생각해온 모든 것을 마침내 파괴할 것이다.”²¹⁾

3. PC 운동 비판

어쨌든 미국정치가 PC 문제로 양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젊은 층이 옛날 같지 않고 훌륭한 지성들이 정론을 펴고 있다. 인간을 처음에는 계급으로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다시 문화적으로 양극으로 나누는 마르크시즘의 끈질긴 자본주의 사회 공격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PC에 대한 반격을 앞에서 지적했지만 이제 미국의 지성이 깨어나고 있다.

혜성 같이 나타나서 젊은 남성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전 하버드대 교수이며 캐나다 토론토 대 심리학과 조던 피터슨 교수와 같은 학자는 PC의 사상적 지원자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마르크시즘과 같은 계열이라 지적하고 비판한다.

피터슨은 1960년대 이후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사상이 (비록 본인들은 소련 치하의 범죄와 공산주의의 경제적 실패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²²⁾ 그에 따르면, “프랑스로부터 시작해 미국 예일대 영어영문학과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이 퍼져나가며 영향력을 획득하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교묘한 속임수를 부려서 억압받는 노동계급과 억압하는 자본계급의 관계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로 이름만 바꾼 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²³⁾ 이에 따라 인종 정체성, 성 정체성 등의 집단적 정체성이 개인 정체성보다 중요하다는 사상을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PC 정치는 사회를 약자와 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이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한

21) Jeffrey D. Breshears, “The Origins of Cultural Marxism and Political Correctness: Part 1”, <https://www.theareopagus.org/blog/wp-content/uploads/2017/04/Origins-of-Cultural-Marxism-1-Article-Revised.pdf>, p.2. (검색일: 2021년 4월 25일).

22) “조던 피터슨”, 우남위키, https://www.unamwiki.org/w/%EC%A1%B0%EB%8D%98_%ED%94%BC%ED%84%B0%EC%8A%A8 (검색: 2021년 4월 23일).

23) 같은 글.

것과 같은 위험한 정치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이 대량 살상을 저지른 전체주의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PC 운동은 LGBT(Lesbian, Homosex, Bisexual, Transgender)와 같은 성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운동을 벌이며 이를 소수자라는 명분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선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차별금지법은 PC 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법체계 속에 파고들고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소리 없이 문화적으로 변혁하는 운동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법안들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문화적 파괴 운동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건강가정법 개정 법안과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 등은 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다른 버전이다.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종교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문화적 파괴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안 제안자들은 유사한 법안이 일곱 번이나 폐기 또는 철회되었음에도 비슷한 법안을 계속 상정하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²⁴⁾ 이들은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것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정상가정을 일부일처제의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정상적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을까. 그들이야말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전도(顛倒)된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빌미로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별은 저들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지 실체는

24) 이대응 기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강력히 반대한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1년 2월 4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018> (검색일: 2021년 4월 24일).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 한국 정부는 한 번도 동성애를 한
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동성애를 금지시킨 적은 없었다. 오직 군대에서만 예외
였다. 군대는 전투력과 군대 사기 기강이 작전 성공 여부와 국민 안전을 판가
름하는 곳이다.”²⁵⁾ 이런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를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국가
는 동성애를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적은 없다.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러 성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통문화와 자
유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해치고 건강한 가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339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
기본법>이라고 변경하고 신규 대조표에 보면 건강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
였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목표로 하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와 가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 차별금지에
관해서 헌법 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
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이 아닌가? 왜 헌법과 별도로 포괄적 차별금
지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구체적인 차별금지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왜 성 소수자를 끼워 넣는가? 성 소수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될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도 헌법 제36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
다.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생활에 관한 조항을 넘어서서 교묘하게 젠더 개념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고
본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

25) [출처]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 소수자의 인권의 가면 뒤에 숨은 반 인권적 악법이다!! 【대국민 기망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 그림자 정부 | SPIKA STUDIO 스피카 스튜디오|작성자 시골목사”.

고 하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은 머리말에서 ‘악마는 세부사항 속에 있다.’는 속담을 인용한 바 있는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관련해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률에 들어간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이다.

거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19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이 그것이다. 여기에 기타 사항들이 더 추가되어 21~23개로 늘어난다. 사실상 인간 생활의 모든 사항을 열거한 것과 같다. 필자는 소강석 목사의 다음과 우려에 공감을 표한다.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 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²⁶⁾

1966-69년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대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중 88.1%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고 조사한 부정직한 것이었다. 한국교회 총연합(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고 한다.²⁷⁾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8%가 “매우 반대”했으며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도 27%였다. 61.8%가 반대한 것이다. 찬성 의견은 26.6%였다.²⁸⁾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더 정직해야 했다. 거기에 그냥 성적 지향이라는 말만

26) 소강석, “[논단]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미래한국, 2020.07.23 Weekly (<http://www.futurekorea.co.kr>) (검색일: 2021년 4월 24일)

27) 박주연, 가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내용 알린 뒤 물으니,”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검색일: 2021년 4월 24일),

28) 같은 글.

들어 있으니 그것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라 하지 않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자, 성전환자(LGBT)라고 정직하게 표기하고 위반했을 때의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었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위원회를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각국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관해서 자기 나라의 전통이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선진국들의 실패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반대를 차별행위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를 채택한 나라들은 동성애자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시키고 동성간 성행위를 법으로 적극 보호하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이 없어져 양심상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권장하게 되고, 그 결과 동성간 성행위에 수반되는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²⁹⁾.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동성간 성행위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에이즈 감염자들, 특히 남성 청소년 및 청년 신규 감염자들이 청소년은 무려 18-26배, 청년은 무려 12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³⁰⁾. 이렇게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다.

헌법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며 이를 살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다. 이러한 법들은 해당하는 사람들과 해당 사항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나 헌법 규정 이외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차별문제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적용하게 되어 종교, 전통, 가치관 등과 문화 전반에 국민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저항과 혼란을

29) 조영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미래한국, 2017.07.05.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30) 김송이, “동성애 반대도 법으로 막나”, Chosun.com, 2020.06.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3577.html (검색일: 2021년 4월 25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근대 철학의 기초를 다지고 인권사상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철학자 칸트의 정언 명령((定言命令, Categorical Imperative)을 상기하고자 한다. 칸트는 최고의 도덕법칙은 정언 명령이라 보고 이는 무제약적으로 선택한 의지를 보장해 주는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정언 명령을 제시했다.

1) 네 행위의 격률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게끔 하
는, 그런 격률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2) 너는 네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한갓 수단으
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하라.³¹⁾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을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 규정하고 정상적인 성적 행위로 교육하는 것이 보편법칙이 되
어도 좋은 격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그것이 보편적 규칙이 된다면 국가 민
족의 절멸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주어야 할 목적이
로가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 자문해 볼 일이다. 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을 젠더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는 정책을 개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31) 임미원 (2001).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법사학연구(24)》, 2001, pp.164-167.

발제 2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박함

오 명 식

(전 부산 카톨릭대 교수)

며칠 전 조선일보 광화문 포럼에 서울대 교수 (권숙인) 가 쓴 “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싫어요”라는 칼럼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르는 다문화 (가족)의 잘못된 개념 즉 저개발국 출신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르고 있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이 “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싫다고 한답니다.

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1항과 그 수술의 집도 의사도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입니다.

위의 두 사례가 아니라도 우리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는 안고 있기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실제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여가위 남인숙·정춘숙 두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교수님들과 변호사님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 여가위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이 과연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록 가톨릭 사제도 수도자도 아니지만, 평생을 천주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가톨릭인 입장에서 이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0. 가정과 가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왜 가정을 대신해 가족이란 용어 선택했는가? 그러면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가정의 구성단위는 가족임에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가족의 개념을 혼인, 혈연, 입양만이 아니라 사실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려고 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번 개정안은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혼 관계인 비혼 부부의 경우 일정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이미 현재도 일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없앴으로 말미암아 이들 비혼 부부를 비롯해 유사한 비혼 동거 가정과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0. 개정안에 동성 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명문은 없으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이라는 미문을 달아 동성 결합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라 보고 이것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6조에 이르는 방대한 개정안을 모두 고찰할 수는 없기에 가정과 동성 결합 동성결혼에 대한 천주교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님이 이 개정안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이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염 추기경은 이날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염 추기경께서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초등학생 대상 성교육 교재 배포 등 몇몇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동성애, 혼인의 의미 등 인간의 성(性)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가족부의 가족 범위 확대 정

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과 어긋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지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념”이라며 “이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른다”라고 했다. 또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이 인종, 출신국가, 성별, 피부색, 종교 등은 물론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의 반대를 동성혼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듯 말한 것으로 오해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황청은 이를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1. 남자와 여자의 몸의 의미

사람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에는 이성이 있어서 동물과 구별됩니다만, 그러나 동물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은 절대로 같은 성끼리 암놈끼리 수놈끼리 교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성끼리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27)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지 생물학적인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지성과 정서와 이성을 지니며 영혼을 지닌 인격적인 몸입니다.

남녀가 성장하여 서로 교합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창세기 1:28)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사람의 혼인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성 기능을 사용하여 두 인격의 일치를 실현시켜주는 삶의 한 형태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하였다. “(창세기 2:24) 이는 큰 신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성끼리의 혼인이나 가족의 구성을 허용하는 사회는 동물 사회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성적지향과 행위의 구별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의 관념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경험으로 객관적인 몸의 질서와는 다르게 자신의 성적 성향이나 성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객관적인 몸의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성애 등 이런 성향 자체를 “객관적인 무질서”로 봅니다.

또한 성행위를 위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선택하는 것은 성에 관한 창조주의 계획과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동성애 행위처럼 성적 행동이 타고난 몸의 객관적 질서와 인격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몸은 단지 이기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3. 혼인과 가정의 성립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속적 전적인 결합으로 서로를 완전히 내어주고 헌신하며 완성하여 자녀 출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정상적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며 사회 구성원을 낳고 양육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며 공동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로 이루어진 비정상 가족에게서 참된 일치와 생명의 출산 남녀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혼인과 가정이 토대로 하는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가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어 혼인으로 볼 수 없으며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법적 보호가 될 수 없고 혼인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가 훼손되고 사회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 출산을 위해 (레즈비언 경우에는 가능) 인공적 생식기술은 이용하거나 (게이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 자녀입양은 가능하겠으나 이런 현상이 사회 만연된다면 그 사회는 파탄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창세기 1, 28)라고 하신 하느님의 인간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음란한 행위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고린토 1서 6장 9절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 우상숭배자, 남색하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7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남자들이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 대신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질책하여 동성애자들에게 하느님의 진노가 내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디모테오1서 1장 10절에서는 불륜을 저지르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밖에도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자 때문에 율법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정의당의 김모 의원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성애로 인한 피해는 군대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군의 상관이 강요할 때 하급자가 거부하기 힘들며 잘못되어 항문성교에 길들여지면 사회에 나와서까지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결과도 낳게 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 저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김모 의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상호합의로 이루어진 사생활의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군대에서 사병은 거의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며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동성애를 하는 것을 국가가 별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데 김의원이라는 분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과시간이 끝났다고 사병이 장교나 선임하사 등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부터 일과가 끝났으니 내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생각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심각한 성 윤리 의식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서울 광장 등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항문성교 등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열린 공간에서 버젓이 벌리는 그들의 음란 행위와 수치심을 모르는 행위를 보고 있으면 소돔의 도시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AIDS 환자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을 성 소수자로 법으로 보호까지 하여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로운 일이 있는지 반문하는 바입니다.

결 론

1. 가정이라는 용어와 정의의 삭제, 양성평등에서 양성삭제 등의 용어 삭제로 장치 무엇을 노리고 하는 선수 작업인가 밝혀라.

2. 동성 커플의 가족관계, 비혼모 등을 위한 후속 입법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라.
3. 모든 건강가정 용어의 삭제로 가족 형태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자들의 합법성 확보로 비혼 등의 동성애자들의 일반화를 추구
4. LGTB 의 대리모 출산, 정자 기증 또는 판매구입으로 인공수정 출산 기타 비혼 출산에 대한 합법 유도 등 고유한 사회윤리의 훼손으로 건전 사회를 파탄으로 이르게 한다.

고로 혼인 및 가족제도가 파괴 원인이 될 이 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되고 소리치는 바이다.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존중이랄까 인정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이거나 동성애자 결합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다만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합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토대로 인정하고 중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이것이 곧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대한 합법화나 그 결합을 혼인과 같은 차원에 두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 자산에 속하는 기본 가치를 흐려 놓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의 선 익을 위하여 또 사회의 선 익을 위하여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제 3

왜 「건강가정기본법」을 무너뜨리려는가?

음 선 필
(홍익대 법대)

I. 여전히 진행중인 건강가정기본법 흔들기

-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그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그러한 시도로 2020.9.1.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81, 이하 “남인순 안”)과 2020.11.2.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2, 이하 “정춘숙 안”)이 있음.
- 두 달 간격으로 발의된 두 개정안은 두 의원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함. 이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호 보완 또는 협력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양자를 비교하건대, 나중에 발의된 정춘숙 안은 남인순 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 입법형식의 관점에서 볼 때, 위 개정안들은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변경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분량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단순히 용어나 표현의 변경 차원이 아니라, 법령의 핵심적 부분의 근본적

인 개정과 더불어 관련 사항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경우에는 통상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아닌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입법절차를 간략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음.
- 정춘숙 안과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가진 2018년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였음.

○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있음.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가족관계 및 가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님.
- 이에 따라 민법은 부(夫)와 부(婦)의 평등한 결합을 핵심으로 하여 가족제도와 질서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현행 법체계를 교란하거나 부정하는 입법 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지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남인순 안과 정춘숙 안의 문제점을 찾되,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규정을 찾아 막을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표면적인 표현보다 그 행간의 의미와 숨은 의도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interpretation) 이상의 해독(decipher)이 필요함.
-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기 전에 먼저 그 입법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II. 집요하게 시도된 건강가정기본법 바꾸기

○ 건강가정기본법을 바꾸려는 남인순의 집요한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2014.4.11.), 제20대에서 전부개정안

(2018.12.7.)을 제출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개정안을 제출함.

- 이번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도 또는 향후 입법계획을 미루어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의하였던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4년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
- 이 법은 ①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②가족의 다양성 존중, ③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
-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8조제1항 및 제9조 삭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2018년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①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②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

조).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가족교육·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등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III. 무엇을 바꾸려는가?

1. 남인순 안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족” 개념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6조·제10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등).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9조 삭제).

마.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기본계획과 가족정책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사.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를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35조).

○ 이전 개정안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점은 첫째,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한 것, 둘째,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임.

-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개념을 두지 않음. 즉 이전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함.

○ 여전히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함

- 현행법의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이를 ‘가족지원’ 또는 ‘가족정책’ 등으로 대체하려고 함. 이에 따라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함.

-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표현을 수정함.

○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표현이 추가됨(안 제2조, 제4조 제2항).

○ 조용히(?) 삭제된 부분이 있음.

-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법 제8조 제1항) 삭제
-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법 제8조 제2항) 삭제
- 가족해체 예방 규정(법 제9조) 삭제

○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재배치하거나 변경하고 있음.

- 법 제8조를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5조 제3항으로 이동함.
- ‘건전한 가정의례’를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변경함(안 제29조).

2. 정춘숙 안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혼인 및 출생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다.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관계의 증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정보·자료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마.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

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상담, 임신·출산·양육 상담,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가족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 이번에 제출된 남인순 안과 대체로 비슷하나, 다음의 점이 다름.

- 여가부의 권한을 더 강화함: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가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 가족상담 전화의 설치·운영을 여가부가 담당하기로 함.
- 가족은 물론, 가정·건강가정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함.
-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족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정춘숙 안은 남인순 안에 비해 더 다듬어진 개정안이라 볼 수 있음. 이 두 개정안은 반대자로부터 공격받을 때는 분산대처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합체될 것으로 예상됨. 즉 향후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화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음.

[주목할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남인순 안	정춘숙 안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u>가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u>	제1조(목적) 이 법은 <u>가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u>

<p>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p> <p>2. 2의2. (생 략)</p> <p>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p> <p>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 ----- ---.</p> <p>1. <삭 제></p> <p>2. 2의2. (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4. “가족지원사업”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족문제”라 한다)----- ----- -----가족 기능-----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p>	<p>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p>	<p>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p>

<p>② 모든 국민은 <u>가정의</u>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u>-----.</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p>	<p>② ----- <u>가족</u>-----.</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8조(혼인과 출산) ① <u>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u><현행과 같음></u></p>
<p>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13조(가족정책위원회) ①</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가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⑥ (생략)</u> <u>제14조(시·도 가족정책위원회) ① 가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u> <u>②-③ (생략)</u></p>
---	--	---

IV. 무엇이 문제인가?

- 이하에서는 남인순 안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정춘숙 안을 아울러 검토함.

1.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규정 삭제가 타당한가?

- 기본법은 관련 법령의 입법 및 해석의 근거가 되는 기본이념을 비롯해서 기본개념의 정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권한·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

- 그런데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입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에 따라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임.
- 이전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만이 아니라 ‘사실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려고 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번 개정안은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향후 법률 개정으로 가족 개념을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는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가족 관련 법률을 적용 또는 집행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됨.
 - 결과적으로, 가정·가족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여가부 재량이 넓어지게 될 것임.
-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提高)하겠다는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 최근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려고 함.³²⁾
 - 즉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등을 추가할 뿐 아니라,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민법 제77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 오늘날 가족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가족서비스 확장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의 가족개념에 따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예로 아동학대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특히 고령사회 대

32)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21.1.26.) 자료집, 19면.

응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노년의 동거부부 등)이 가족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³³⁾

- 요컨대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³⁴⁾
-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현행 법체계(배상·보상·연금지급,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법적 보호가 더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의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사실혼 등 다양한 인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족 관련 가치체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위기가족, 1인가구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활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규범의 정비가 필요함(예컨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임.

- 가족의 정의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사실혼 가족만 아니라 단순한 비혼동거 커플이나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비혼동거커플이나 동성커플을 사실상의 인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법정화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왜냐하면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의 사회적 기능 내지

33) 이는 남인순 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20.12.)에 나타난 여성가족부의 의견임(동 보고서, 23면).

34)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21.1.26.) 자료집, 18면.

공동선(共同善)에 대한 기여 때문임을 명심하여야 함.

- 따라서 혼인의 고유한 의미를 갖지 않은 비혼동거커플이나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해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족 규정을 삭제하려는 입법시도는 경계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가족 정의규정의 삭제가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업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면, 더욱 비판 받아야 할 것임.

2. 도대체 「가정」과 「건강가정」 개념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남인순 안과 정춘숙 안은 공통적으로 「건강가정」 개념을 삭제하려고 함.
 - 남인순은 2018년 개정안에서 「가정」의 개념도 삭제하려고 하였음. 2020년 개정안에서는 가정의 정의규정은 남겨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의 모든 조항에서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고 있음.
 - 정춘숙은 가정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모든 현행 정의규정 자체를 삭제하고자 함.
- 도대체 왜 그리 「가정」과 「건강가정」 용어를 극도로 혐오하는가? 전체적으로 보건대, 「건강가정」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용어도 함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론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화중의 기고에 의하면, 이혼과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그 건강상태를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적 토대가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함³⁵⁾.
 -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건강가정 시책이 가족 돌봄의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반

35) 김화중,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한다”, 한겨레신문, 2006.12.2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80355.html>.

대이유로 제시함.

- 건강가정기본법 반대론의 기저에는 가족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으로 여기는 급진 여성주의가 자리잡고 있음.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은 가부장제를 타파하려는 여성주의 관점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단지 용어에 관한 견해 대립 이상으로 가정 및 가족에 대한 기본인식과 가치관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음.
 -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전통적인 혼인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 및 가정의 형성 외에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됨.
- 여하튼 건강가정 개념을 거부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오해는 「건강가정」을 가정 관련 정책 및 입법의 지향점(목표)이라 보지 않고, 이를 현실적인 가정의 유형(형태)으로 이해하는 것에 기인함.
 - 즉 가정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가정이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건강가정」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이러한 건강가정의 개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정(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가정)을 구체화한 것임. 제36조 제1항의 가정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진 개인)와 제11조(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및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는 개인)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가정임을 명심하여야 함.
 - 이처럼 「건강가정」은 가정 및 가족생활의 목표(지향점)를 가리키는 것이지, 가족형태나 가족유형 또는 가족형성의 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과 편견을 고려함이 없이 「정상가족」 개념을 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봄.
 - 건강가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가족형태를 특권화한다고 주장

하는 것은 「건강가족 = 정상가족」이라는 그릇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임.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정을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판하는 것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볼 것임.

- 따라서, 다양한 가정의 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강가정 개념은 가정 관련 법률의 지향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편협한 이해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가정 개념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것임.
- 현행처럼 제3조에서 「가정」의 정의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다른 조항들에서는 가정을 굳이 가족으로 바꾸는 것에 집착하는지 대단히 의아(疑訝)함. 이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가정의 정의규정만은 부득이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상식적으로 볼 때,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가정의 정의규정을 없애고 가족의 정의규정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여간 이번 개정안은 입법의 상식에 맞지 않음.
 -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가정 개념을 삭제한 셈이 되었음.
 - 참고로, 정춘숙 안이 가정과 가족을 비롯한 모든 현행 정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황당하지만, 그 숨은 의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됨.
- 가정을 가족으로 기계적으로 바꾸다보니 어법상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나타남.
 - 현행법에서 규정하듯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임. 즉,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핵심으로 함. 그래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임.
 - 경우에 따라 가족과 가정이 혼용될 수도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구별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1조 제2항 5호에서 “직장과 가족의 양립”은 어색함. 생활단위 또는 생활공동체로서 ‘직장과 가정의 병립’이 자연스러움. 또는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그나마 나을 것임.
- 안 제21조 제4항의 ‘노인단독가족’은 부적절함.³⁶⁾ 가족 자체가 복수적 개념인데, 단독(1인)으로 가족이 된다? 1인 가구는 적절한 표현이나 1인가족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 아닌가?
- 이처럼 기계적으로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다보니 어법에 맞지 않은 개정안이 되었음. 그래서 입법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3.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조), “가족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라고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강조함.
- 현행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을 열거하고 있음(제21조 제4항).
-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범위가 하위법령 규정 또는 해석론에 의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가족의 정의 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동성 커플(시민동반자, 동성부부)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
- 동성커플의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 (diversity of family forms)를 대단히 강조함(예컨대 옥야카르타 지침 24의 ‘가족형성권’)

4. 가족관계의 평등성을 더 강조하면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기본이념은 해석론과 향후 입법론의 지침을 제공함.
- 개정안의 기본이념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36)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춘숙 안에서는 이를 ‘노인단독가구’로 표현함(제21조 제4항).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반하여 현행법은 개인의 필요 충족과 사회적 기능(사회통합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정안은 가정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삭제함.
 -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법 제8조 제1항) 삭제
 -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법 제8조 제2항) 삭제.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가족해체 예방 규정(법 제9조) 삭제
- 이로 말미암아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낙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혼 등 가정해체에 대한 예방 노력이 경시될 수 있음.

5. 가족형태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임.
- 특히 정춘숙 안 제26조(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의 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처럼 정춘숙 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등이 대중매체(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나타난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도록 규정함. 이는 일종의 차별금지법 규정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정춘숙 안은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며(제32조 제1항),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제34조의2 제7항 제5호).
- 이처럼 정춘숙 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면

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에게 부여함.

-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임.³⁷⁾
 - 설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임.

6. 동성 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 근거로 원용될 것이 아닌가?

-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명문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해석론에 따라 언제든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안 제2조(기본이념)의 가능한 해석론
 -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여기서 가족의 정의가 법정(法定)되지 않고 해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성 커플을 가족의 한 형태로 주장할 수 있음.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동성 동반자(same-sex partnership)' 또는 '시민 결합(civil union)'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을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해석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³⁸⁾
 -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 여기서 「양성 평등한」 아닌 「평등한」 가족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규정은 동성 커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안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해석론
 - 모든 국민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이 부분도 역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37)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가칭)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을 추진계획의 하나로 밝히고 있음.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러한 입법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줌.

38) 참고로, 영국에서 당초 동성간 결합을 의미하는 시민 결합에 이성간 결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을 전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거듭 강조되고 있음.

- 정춘숙 안에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제12조(가족의 달과 가족의 날), 제32조(가족교육 등)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고 있음(제15조 제2호, 제26조 제명, 제28조 제2항 제2호)³⁹⁾

-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에 동성커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임.
- 즉 평등한 가족(관계)이 “양성”평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농후함.

V.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활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규범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민법을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기조 위에서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그 결과, 남인순 안과 정춘숙 안에는 ‘건강가정’이 없고, 오직 민주적이고 평등한 ‘다양한 가족’만이 강조됨. 즉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은 재구성됨.
-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임. 특히 정

39) 한편, 정춘숙 안 제5조 제3항에서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실현”, 제26조 제1항에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라는 표현을 남겨두고 있음. 이것이 의도적인 유보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법상의 실수로 남겨진 것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드러날 것임.

춘숙 안은 가족 형태를 차별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 가족원 등에게 부여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임.
-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그 결과, 설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개정안에서 동성 결합 및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한 이념적 바탕 위에,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개정안의 몇 규정들은 몇 단계의 논리적 조작 또는 연결에 의하여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개정안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규정한 현행 헌법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그러한 입법을 진행하기 위한 중간단계라 볼 수 있음.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 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tricky) 시도라 볼 수 있음.
- 그 결과, 남인순 안과 정춘숙 안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과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교란하거나 개변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에 관련한 현행 법체계 질서를 뒤엎으려는 입법쿠데타라고 볼 것임.

토 론

토론 1

김 지 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음선필 교수왜 「건강가정기본법」을 무너뜨리려는가? 라는 제목의 발제를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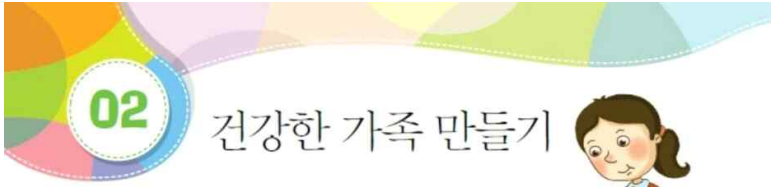
음선필 교수왜 「건강가정기본법」을 무너뜨리려는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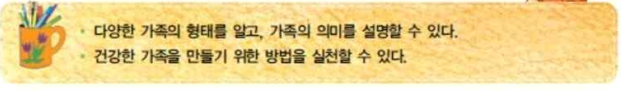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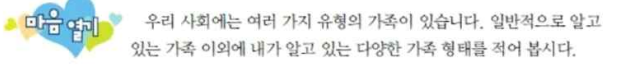
-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조), “가족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라고 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강조함.
- 현행법은 다양한 가족형태로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을 열거하고 있음(제21조 제4항).
-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범위가 하위법령 규정 또는 해석론에 의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가족의 정의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동성커플(시민동반자, 동성부부)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
 - 동성커플의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족형태의 다양성(diversity of family forms)를 대단히 강조함(예컨대 욕야카르타 지침 24의 ‘가족형성권’)


1. ”다양한 가족“ 이라는 표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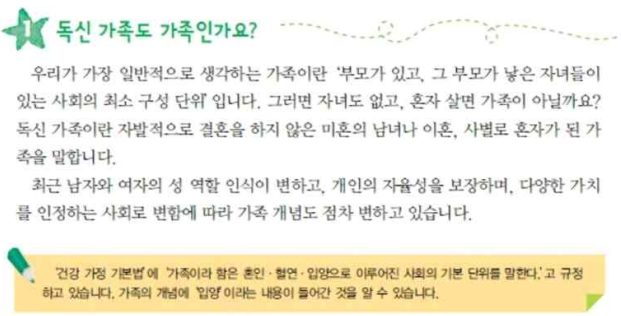
1. 초등학교 5학년 보건교과서에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동성애 가족을포함된 것을 학부모들이 뒤늦게 발견, 교과서 회사에 항의 방문하여 삭제한 사례가 있음














2. 2006년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 자료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포함시킴

⑦ “가족” 재판 짜기

우리 사회는 소위 ‘건강한’ 이성애자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와 가족 구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평등한 사회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중요한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결합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의제 성평등 교육 (기초) 자료 중에서 -
최현숙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초청한 바바라 슈티글러 박사가 ‘젠더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발제문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동성 결혼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음

가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띠고 있다.

z 섹슈얼리티와 생식

z 사랑과 결혼

z 결혼과 출산

z 생물학적 부모와 사회적 부모의 관계가 서로 해체되고 있으며,

z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 대신 선택에 의한 친족관계 및 관계에 의한 성적 개념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핵가족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z 맞벌이 가족

z 사실혼 관계의 공동체

z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

z 패치워크(patchwork) 가족(일명 ‘조각보’ 가족)

z 동성애에 기초한 공동체

z 레인보우(rainbow) 가족(일명 ‘무지개’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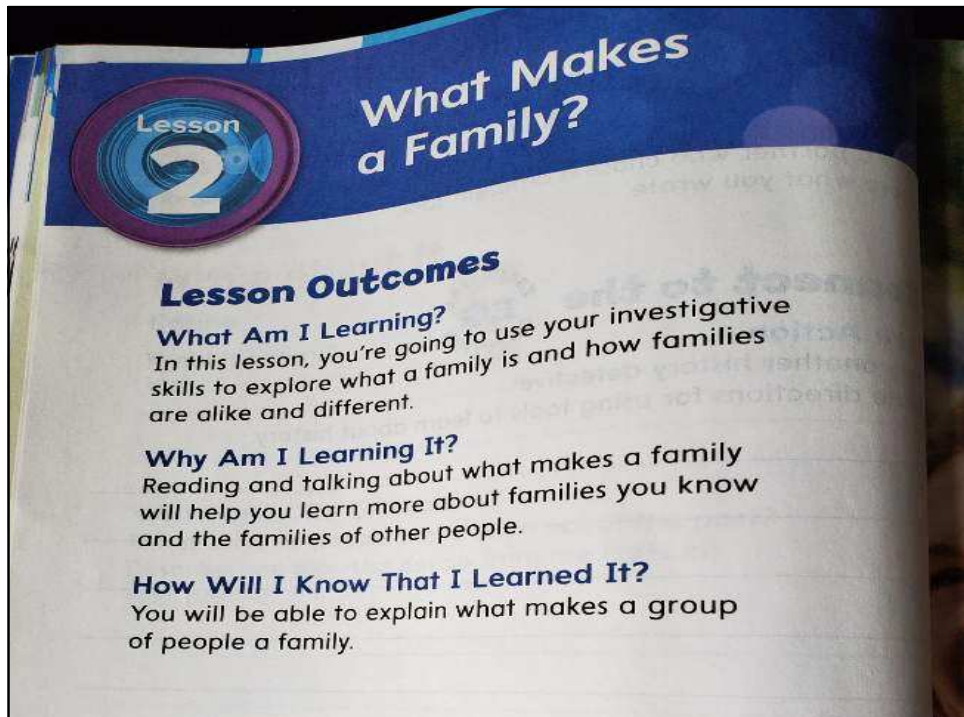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전통적인 부양자 가족 모델

동성애에 기초한 공동체는 모든 연령 및 사회계층에서 나타난다.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물질적(재정적) 측면에서는 혼인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게 되었다.

동성애에 기초한 관계는 생물학적 성(sex)의 측면에서 대안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잉태하는 신체적 기능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성적 욕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성애적 관계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레인보우(rainbow) 가족(일명 ‘무지개’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장 분명하게 초월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동성애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녀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동성애적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원했거나 출산한 경우도 있다.

4. 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 교육에서 동성 결혼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국내에 소개됨



Do all our families look alike?
 No. Some are very small.
 Some have one dad, some have two.
 And some have none at all.

Do all our families play alike?
 No. Some ride bikes or run.
 Some play games, and some jump ropes,
 Or play guitars for fun.

Then how are families all alike?
 What do they have lots of?
 Families help, and families try.
 They all have lots of love.



2 Find Evidence

Reread parts of the poem that are about how families are different.

Draw two lines under the words that show how families are the same.

3 Make Connections

Talk How is your family like the families in the pictures and poem?



How does your family look, sound, and play?

Chapter 1 Lesson 2 17

Analyze the Source

1 Inspect

Read Look at the title. What do you think this poem will be about?

Circle words you don't know.

Underline clues that tell you:

- Who are the people in a family?
- What do all families have?
- Where do you see families?

My Notes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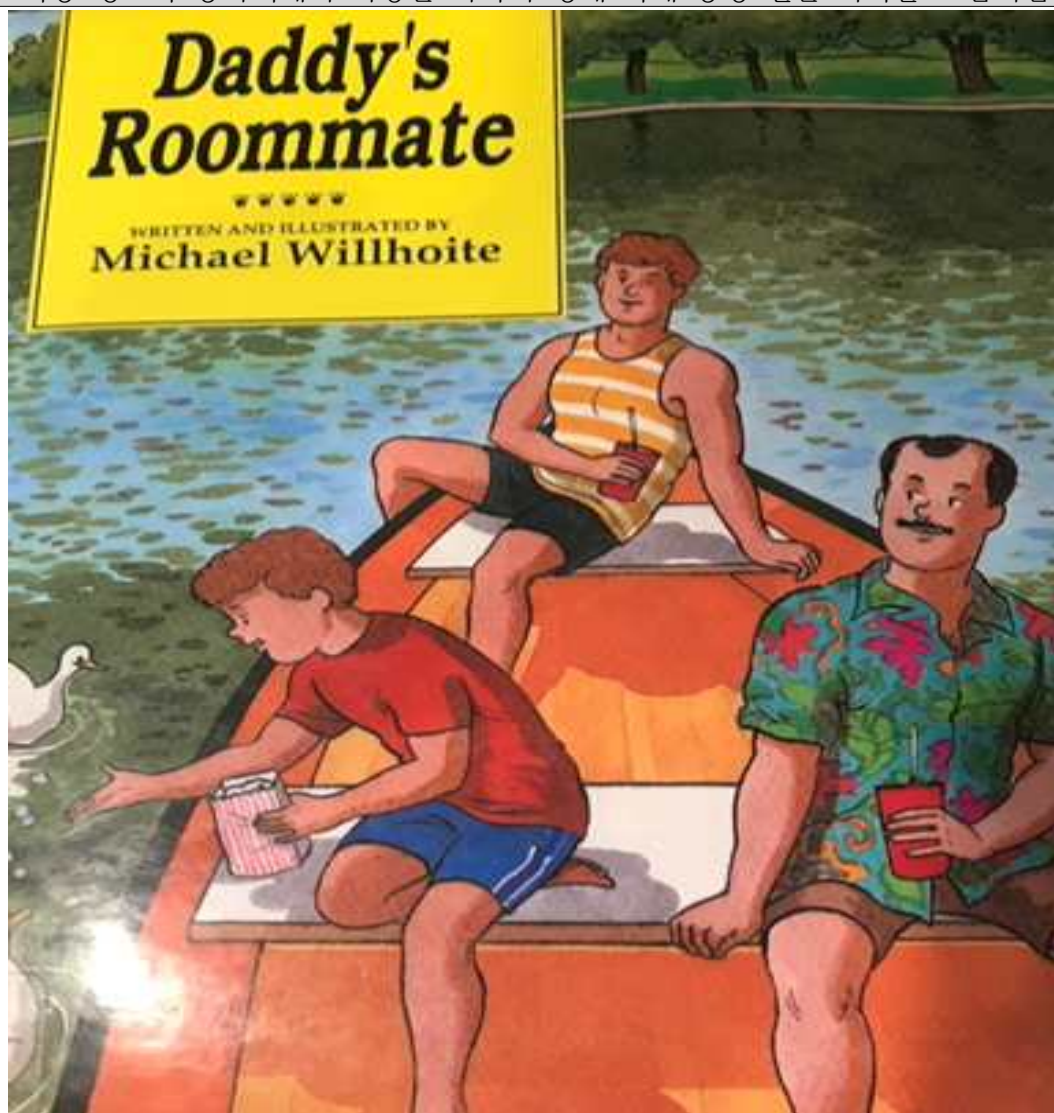
Do all our families look alike?
 No. Some are very small.
 Some have grandmas in the house,
 And some have none at all.

Do all our families sound alike?
 No. Some are rather loud.
 Some are quiet and very calm,
 Just whispering's a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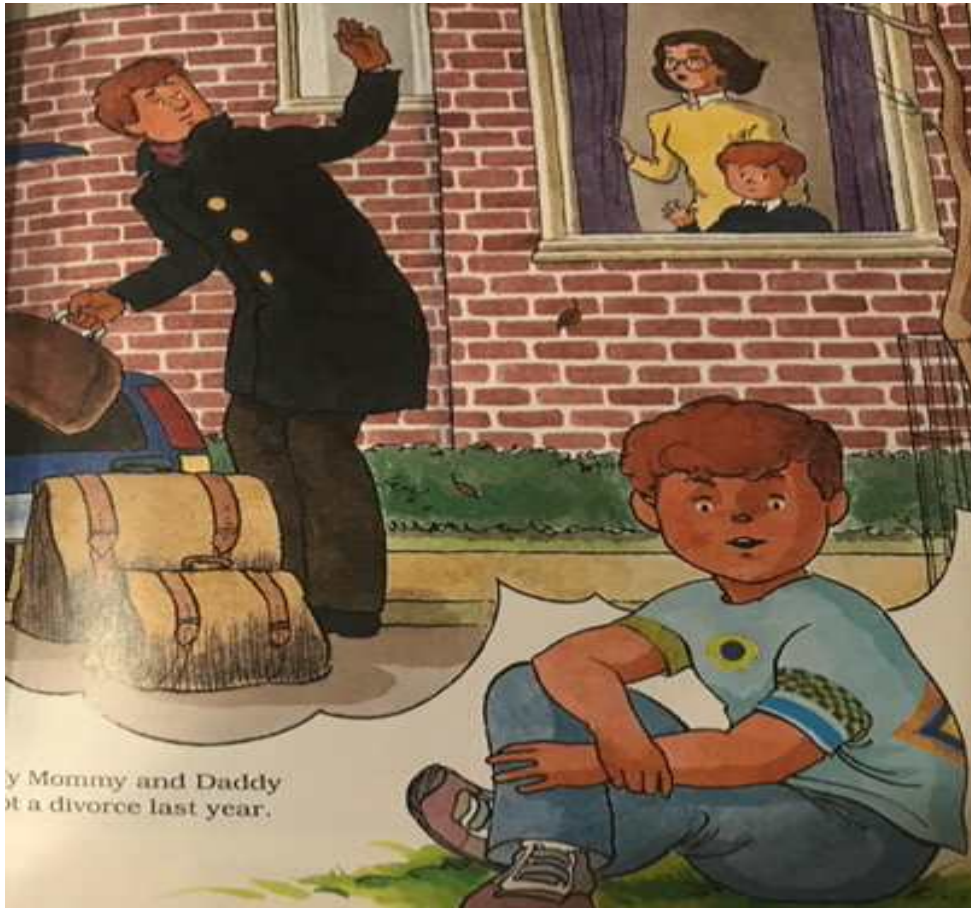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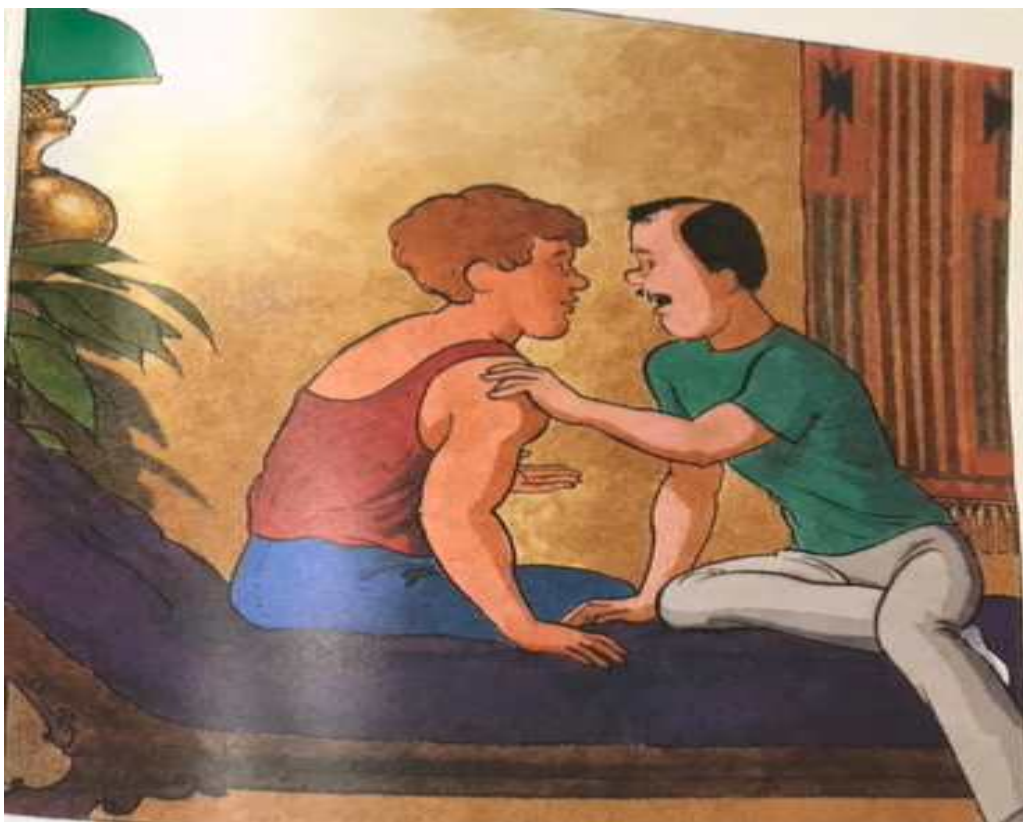
16 Lesson 2 What Makes a Family?

5. 각종 성교육 동화책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속에 동성 결혼 가족을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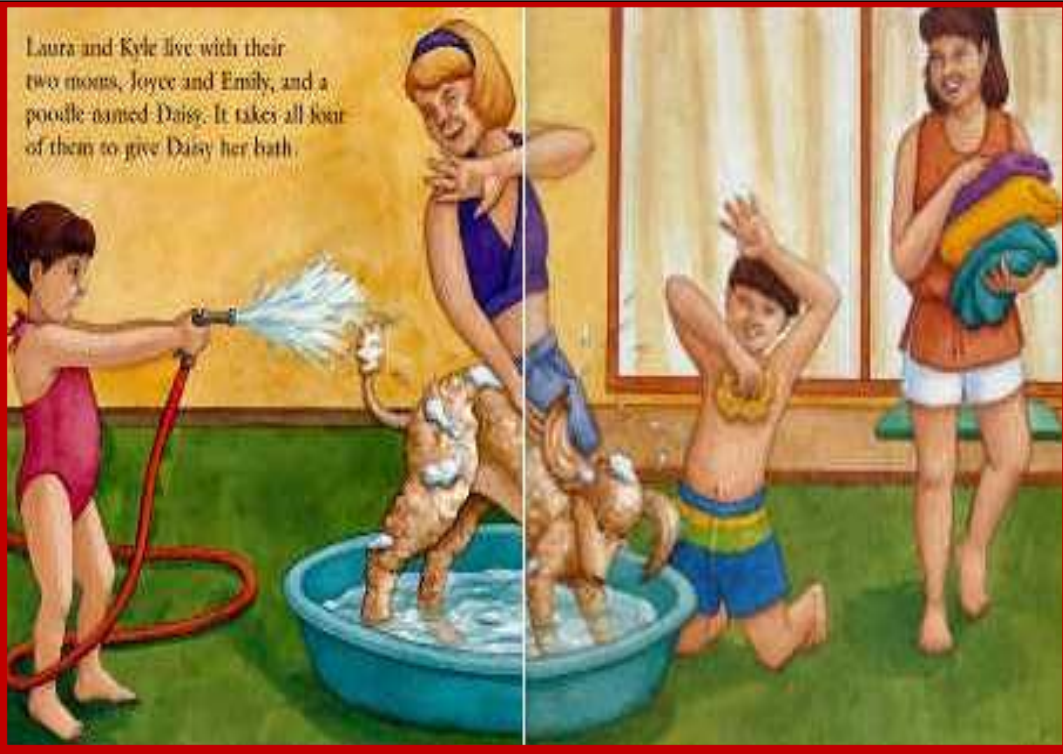


daddy's roommate
저자: Michael Willhoite
연도: 1990년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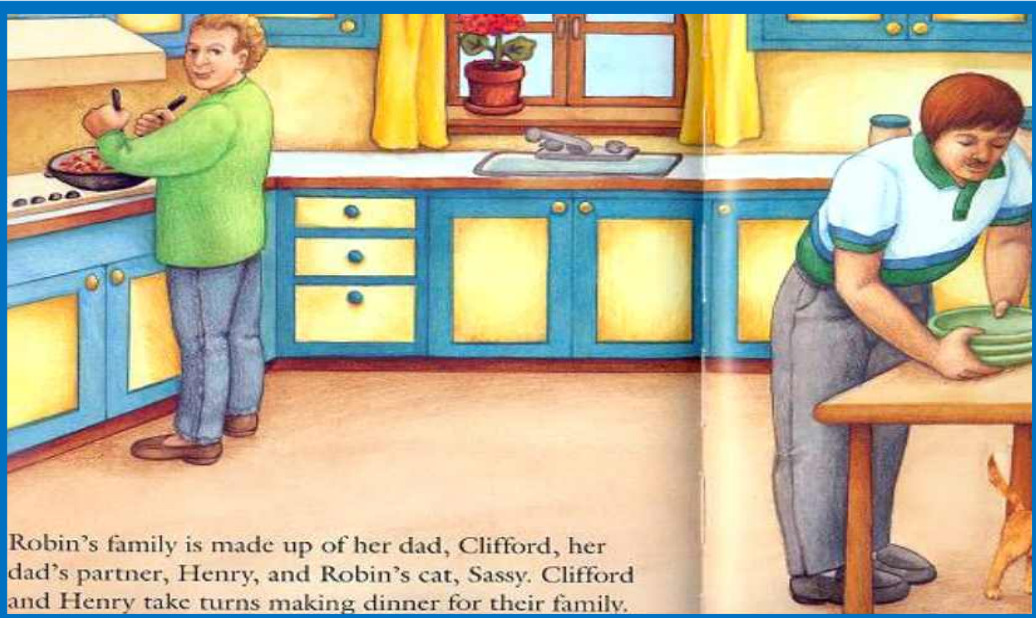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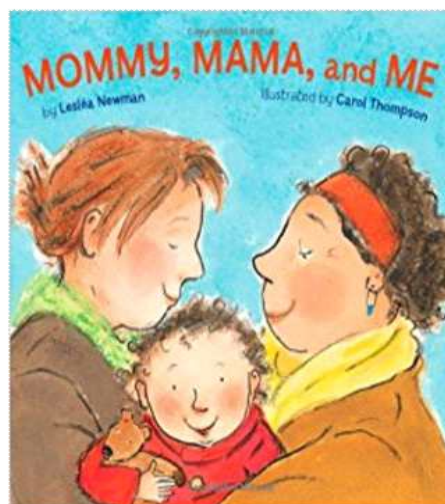


Laura and Kyle live with their two moms, Joyce and Emily, and a poodle named Daisy. It takes all four of them to give Daisy her bath.



Robin's family is made up of her dad, Clifford, her dad's partner, Henry, and Robin's cat, Sassy. Clifford and Henry take turns making dinner for their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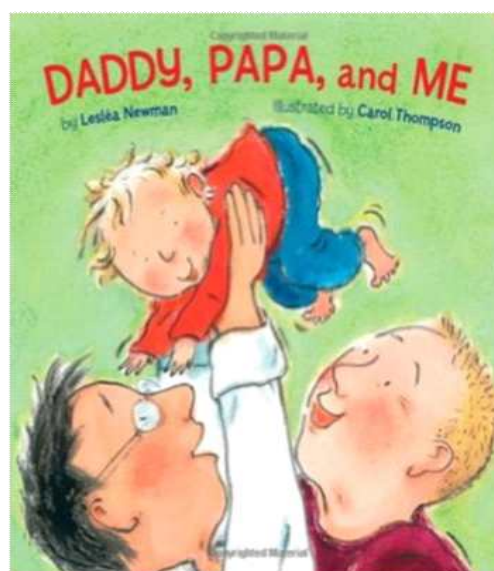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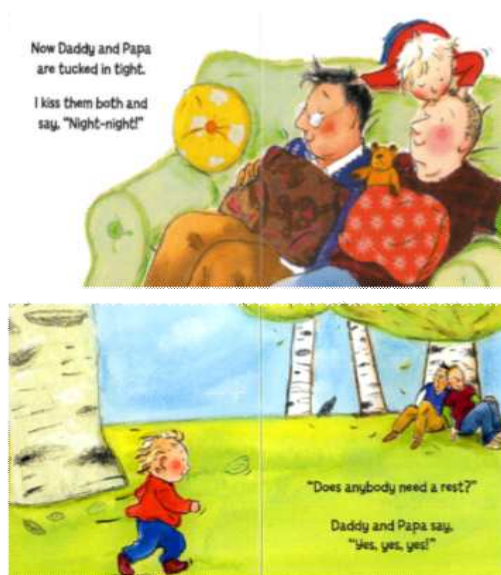


mommy, mama, and me

저자: esléa Newman

연도: 2009년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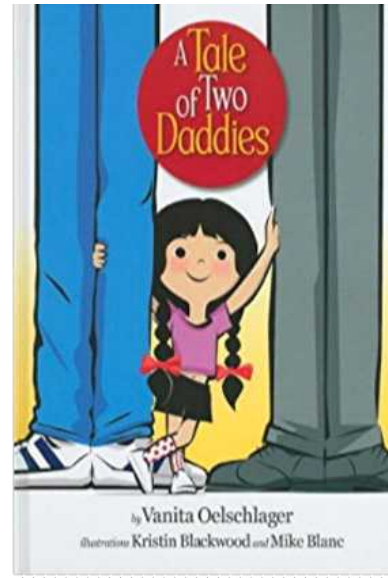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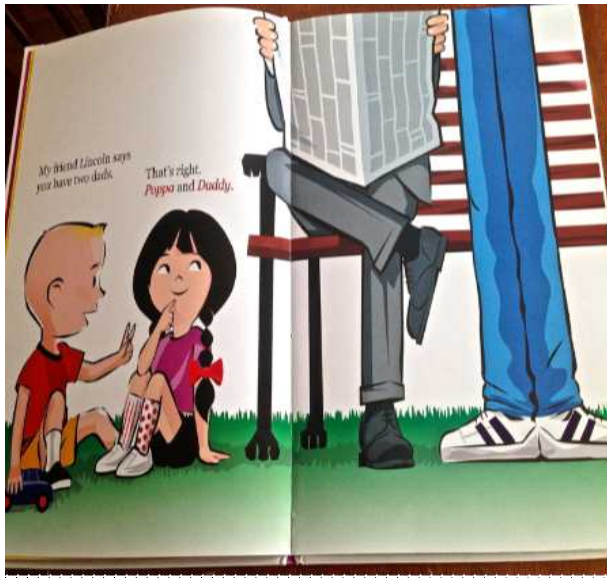


Daddy, Papa, and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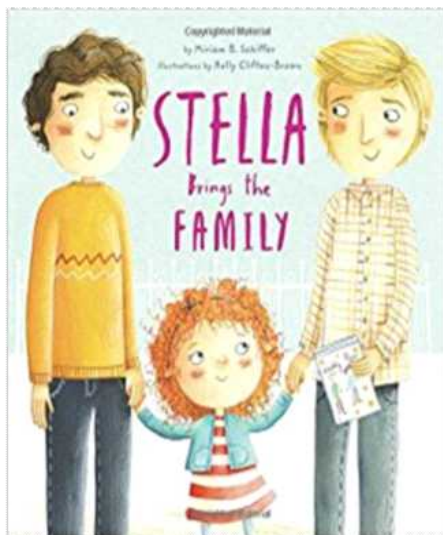
저자: Lesléa Newman

연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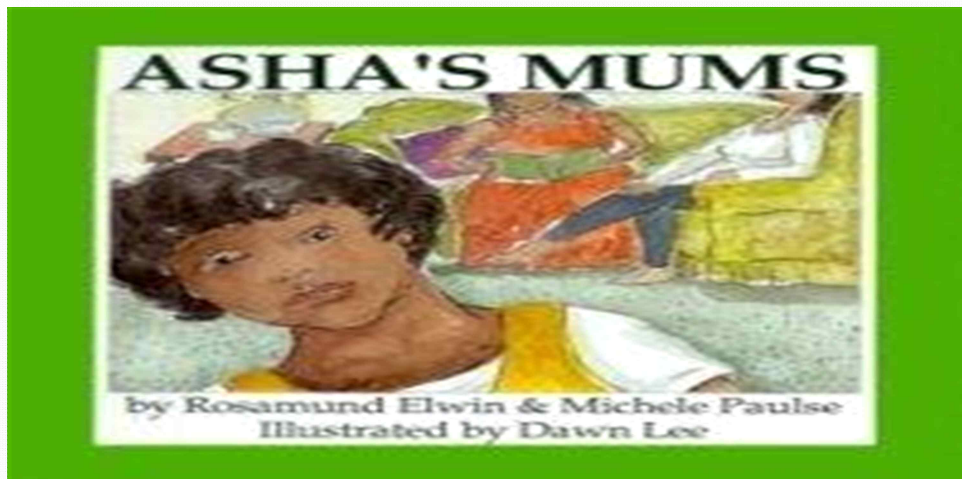
국가: 미국



A Tale of Two Daddies
 저자: Vanita Oelschlager
 연도: 2010년
 국가: 미국



Stella Brings the Family
 저자: 미리암 B. 쉬퍼
 연도: 2015년 5월 5일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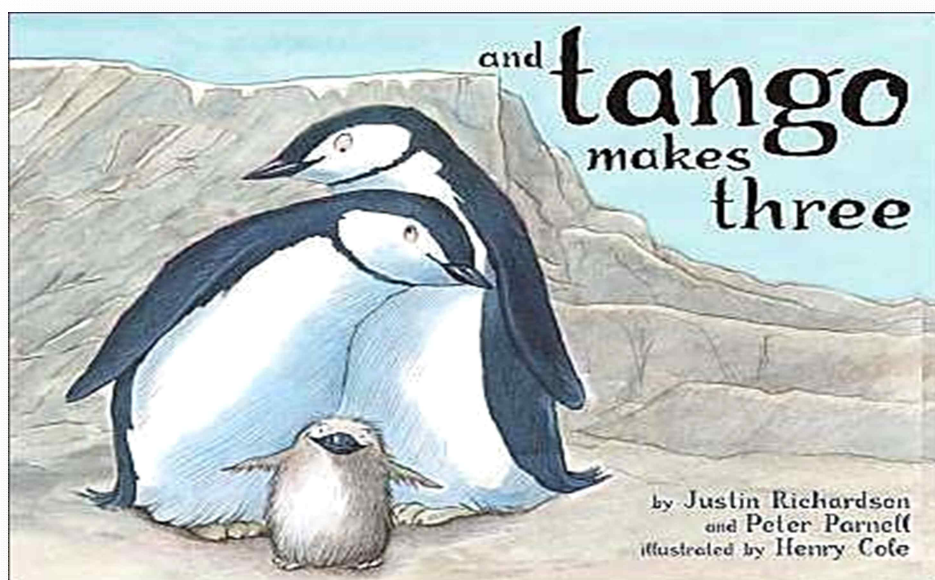


Asha's Mums

저자: Michele Paulse와 Rosamund Elwin

연도: 1990년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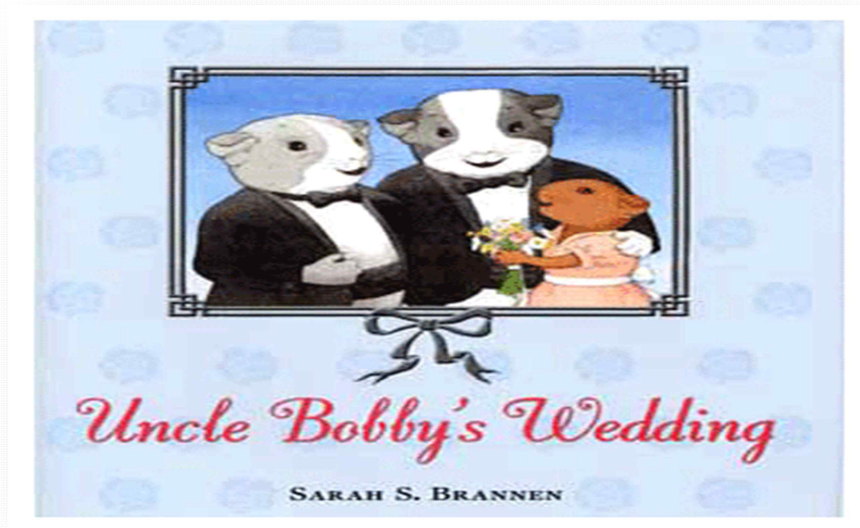


And Tango Makes Three

저자: 피터 파넬과 저스틴 리처드슨

연도: 2005년

국가: 미국



Uncle Bobby's Wedding Hardcover

저자: Sarah S. Brannen

연도: 2008년

국가: 미국



2. 가족의 개념이 "확대" 되었다며 건가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언론들에 대한 질문 :

과연 모든 "확대"가 좋은 것인가 ?

개념의 확대를 통해 통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와 확대를 통해 오히려 본래의 의미, 존재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 : 이른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동성 결혼, 동성 동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국내, 해외에 허다한 와중에 이번 건가법 개정안이 동성 결혼 합법화로 가는 수순을 밟는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기우로 모는 기망적 태도를 중단 할 것을 학부모들은 촉구한다

또한 가족, 가정의 개념을 확대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해체, 혐오하는 건가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토론 2

모든 형태의 가정을 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하여

연취현 변호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남인순 의원안 (2020. 9. 1.)	정춘숙의원안 (2020.11. 2.)	현행법안 (2003. 12. 29.)	서정숙 의원안 (2021. 2. 15.)
목 적 (1)	가족에 대한 국 민의 권리·의 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가족정책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가 족구성원의 복 지증진에 이바 지하는 것	가족에 대한 국 민의 권리·의 무 및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가족정책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가 족구성원의 삶 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는 것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 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 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 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 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 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 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 책을 강화함으로써 가정 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구 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
기 본 이 념 (2)	누구든지 가족 의 형태를 이유 로 차별받지 아 니하며, 가족구 성원이 서로 존 중하고 부양· 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 함으로써 민주 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 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가 족의 형태를 이 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가사노 동 등에 함께 참 여함으로써 민 주적이고 평등 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 어야 한다	(현행법과 동일)
정	-(삭제)가족, 건강가정	<정의규정 전부 삭제>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의	-(수정)건강가정사업 → 가족지원사업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삭제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29조(가정의례) 제30조(가정봉사원)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여가위 산하 가족정책위원회(13조, 14조) -제35조의6(가족상담 전화의 설치·운영 등)	-국무총리 산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제13조) -제22조의2(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등) -제25조의2(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제26조의2(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
변경	- 제31조(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지원) → 제31조(이혼 전·후 가족지원)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제35조(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제31조(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지원) → 제31조(이혼 전·후 가족지원)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제35조(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사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제35조(가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화 및 결격요건, 협회 구

	- 건강가정사 → 가족전문 사	→ 가족전문 사		성 등 (35조의 2 내지 8)
--	------------------------	-------------	--	----------------------

I. 법안 비교

★ 이양수 의원안 : 건강가정사 자격 강화 및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 내용 추가

II. 건강가정기본법 대립의 본질

	보수입장, 가정학계	진보입장, 여성학계 (동성애 옹호단체 포함)
기능	-건강가정은 이 법이 추구하는 지향점 -건강가정은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능의 문제 :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	-법은 현재의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기능 -건강한 가정은 이데올로기이며, 환상에 불과함.
목적	-가족 변화에 대한 위기론을 기본으로 가족가치의 회복 및 건강가정으로의 복귀 추구	-가정해체는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상, 생활형식의 변화 -가족주의는 극복해야할 대상 -건강가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가족 형태를 특권화 함
가족	-헌법과 민법에 기초하여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단위로 이해	- 가족은 생활공동체 → 관계중심으로 이해하여 가족 다양성 수용 필요 - 가족을 법률혼 개념을 기초로 한정할 필요 없음 → 사실혼, 동거 등도 포섭 필요 (가족지원기본법안 제3조, 다만, 다음 각호의 가족도 이 법에 의한 가족으로 본다. 1. 사실혼 가족, 2. 미혼모부 가족, 3. 위탁 아동 가족, 4. 공동생활 가족, 5. 후견인이 있는 가족, 6. 외국인 가족, 7. 단독 가구, 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가족)

동성혼	-법률상 혼인에 근거하므로 동성혼은 가정에 포함×	<p>* 기존의 가족 정의가 '이성에 결혼 중심 주의'에 근거한다며 비판</p> <p>(→ 법개정을 통해 동성애 합법화하려 한다는 반대입장에 불씨)</p>
-----	-----------------------------	--

Ⅲ. 가족정책기본법 통과 후 생길 일

1. 간판 교체

가정해체의 급속화, 가정 내 갈등 극대화,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실질적 내용의 변화가 없는 “건강가정”용어 삭제를 위한 막대한 예산 소진

2. 사람 교체

가정 해체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오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끌어온 주축세력(가정학계 중심)을 퇴출시키고 관계 중심의 생활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학계 위주의 전문가로 센터 구성원 교체 및 운영 방향 변경

3. 예외의 원칙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복지가 아닌 해체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지원책 위주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의 형태에 따른 역차별 발생 우려

4. 민법개정 및 헌법개정

현행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활공동체를 포섭하기 위한 법률개정 ⇒ 유럽식 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및 일반화

5. 가족질서의 혼란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생길수록 원칙과 예외가 분명하여야 함에도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해체가 급속함에 법이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가족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현재 건강한 가정까지도 해체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IV. 건강가정기본법의 나아갈 방향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가족 형태별 맞춤지원 강화**)

○ 원칙의 강화 및 예외의 확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 특별법을 통한 지원 강화

○ 가족 형태에 따라 정책 방향 세분화

유형	가족형태	정책방향
합법 가족	부모와 자녀, 양부모와 입양아, 이혼부모와 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보호 및 강화
배려 가족	미혼모·부와 자녀, 사실혼(동거, 비혼 이성커플)	사회적배려
불법 가족	동성커플, 일부다처, 다부일처, 다부다처, 비혼 출산을 통한 결합, LGBT의 대리모 출산 및 정자 기증·인공수정 출산을 통한 결합	정당화 금지

○ 진정한 가정 보호가 가능하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최근의 여러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논의가 되어야 함.

토론 3

이 진 수
(더 워드 뉴스 대표)